

보도일시	2021. 10. 7(목) 10:00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년 10월 6일(수) 14:00
담당부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대외경제팀
	허수진 팀장(02-731-2440), 신해진 연구관(02-731-2453)
	KDI 지식경제연구부 한재필 연구위원(044-550-4020)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 국제컨퍼런스
대니 로드릭, “전통적 복지모델 넘어서 양질의 일자리 정책 필요”

- 일 시: 10월 7일(목) 09:00~15:40
- 장 소: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3F)
- 주 최: 국민경제자문회의
- 주 관: KDI

-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는 10월 7일(목) 오전 9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를 주제로 2021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함.
- 저성장·양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고용 불안과 경제적 불균형 심화, 재정부담이 증대됨에 따라 포용적이면서 성장친화적인 복지정책이 모색돼야 할 시점임.
- 이번 컨퍼런스는 ‘견고한 성장, 양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는 복지국가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침.
-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성을 높이는 것이 한국 복지국가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하고, “가령 출산, 육아, 교육 서비스의 확충은 복지정책이면서 동시에 여성의 취업과 고용률을 높이는 성장친화적 정책”이라고 언급함. 아울러 “현금성 복지보다는

사회서비스, 그리고 고령층 뿐 아니라 근로연령층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복구 복지국가 개혁의 두 가지 큰 교훈을 바탕으로 한국형 복지국가의 발전방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함.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고, 성장의 과정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하며,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것이 혁신적 포용성장의 세 가지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분배의 기반이 되는 성장,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분배, 선순환의 매개체가 되는 일자리의 삼각축이 골든 트라이앵글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함.
- 홍장표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경제모델에서 공정, 혁신,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조화와 균형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모델, 사후적 선별복지를 중시하는 전통적 복지모델을 넘어 '좋은 일자리와 포용적 복지'를 지향하는 새로운 모델로의 이행이 요구"된다고 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양질의 일자리, 포용적 복지의 조화를 지향하는 담대한 제안과 제도개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특별세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설계]에서 대니 로드리크(Dani Rodrik) 美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기술진보와 초세계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환경 하에 생산 이전 혹은 이후 단계 정책에 초점을 둔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은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하며, 생산단계에 직접 개입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함.

* 로드리크 교수는 국내 정책을 개입 단계(생산 이전/생산/생산 이후)와 대상 계층(저소득/중산층/고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한 3x3 '정책 매트릭스' 제시

- 구체적으로 정부와 고용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산업·지역 정책, 노동친화적 기술과 조화를 이루는 혁신정책, 국내 노동·사회 기준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공간을 허용하는 국제적 차원의 정책협력 등이 민간과 공공간의 협력적·반복적·실험적 노력과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함.

□ [기조세션: 더 나은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에서 레인 켄워시 (Lane Kenworthy) 美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적 정치체제, 큰 복지국가, 제품과 노동시장에 대한 온건한 규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복구형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가 인류가 지향해 온 '좋은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함.

○ 현재까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체제를 완벽히 수용한 국가는 북유럽 국가 뿐이지만 여러 국가들이 이를 부분적으로 채택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함.

□ 케네스 넬슨(Kenneth Nelson)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교수는 '균형적 세대 간 복지계약'을 통해 연령그룹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보호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 갈등을 방지하고 정책수립의 선순환을 만들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넬슨 교수는 세대 간 복지계약 유형을 균형적(balanced), 아동친화적(pro-child), 노동친화적(pro-work), 노령친화적(pro-old)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한편, 한국은 아동기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정도가 높은 반면, 근로연령대 위험에 대한 보장정도가 특히 낮은 '아동친화적 세대 간 복지계약'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한 바, 이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에 좋은 시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정책세션: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개혁]에서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는 '복지-고용-경제-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려면 고용 증가와 인력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투자성' 복지지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함.

* 교육·보육 등 사회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의미

○ 스웨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재정안정화, 사회서비스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 복지개혁

사례를 설명하고, 한국도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성 지출의 과도한 증가를 통제하고 근로연령대 인구 대상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신광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본과 미국 사례를 통해 가족 형성, 교육, 노동시장, 조세제도, 복지, 인구변화, 경제성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혁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또한, 사회적 합의와 실현가능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고용창출, 소득분배 측면에서 전통적 복지국가에 비해 뒤처지며, 재정상황은 아직 양호하나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고용창출, 소득분배, 재정규율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사후적 재분배’보다 ‘시장소득의 균등한 분포’를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홍장표 KDI 원장, 각 세션별 발표자 및 토론자 등이 현장에 참여함. 컨퍼런스 실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됨.

❖ **첨부 1. 세부 일정**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 **첨부 3. 연사 프로필**

❖ **별첨 1. 컨퍼런스 개회사, 축사, 환영사**

❖ **별첨 2. 컨퍼런스 현장 사진(7일 10시 배포 예정)**

❖ 첨부 1. 세부 일정

시 간	프로그램
09:00~09:20	<p>개회식 개회사 이 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축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환영사 홍장표 KDI 원장</p>
09:20~10:30	<p>특별세션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설계 사 회 이 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특별연설 복지국가를 넘어선 경제정책 Economic Policy Beyond the Welfare State 대니 로드릭(Dani Rodrik) 美 하버드대학교 교수 *온라인 연결 지정토론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 오준병 인하대학교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Q & A 참여형 토론</p>
10:40~12:10	<p>기조세션 : 더 나은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 사 회 성효용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기조연설1.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와 '좋은 사회' Social Democratic Capitalism and the Good Society 레인 켄워시(Lane Kenworthy) 美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교수 기조연설2. 세대 간 복지계약과 순환적 번영 The Intergenerational Welfare Contract and Circular Prosperity 케네스 넬슨(Kenneth Nelson)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주병기 서울대학교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Q & A 참여형 토론</p>
13:30~15:30	<p>정책세션 :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개혁 사 회 안상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발 표1. 복지과 경제의 선순환 모델: 유럽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 발 표2. 불안정한 복지와 사회적 불안정: 일본과 미국의 사례 신광영 중앙대학교 교수 발 표3. 소득분배 현황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언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 패널토론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욱 KDI 연구위원 Q & A 참여형 토론</p>
15:30~15:40	<p>폐회식 폐회사 이 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p>

❖ 첨부 2. 세션별 발표요약문

특별세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설계

복지국가를 넘어선 경제정책

(Economic Policy Beyond the Welfare State)

대니 로드릭 美 하버드대학교 교수

- 기술진보, 초세계화, 시장근본주의는 국내 정책의 붕괴를 초래하지만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은 증상만 완화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복지국가 모델은 적절한 교육을 통해 누구나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교육, 연금, 사회보장과 같은 생산 전·후 단계 정책에 초점
 - 그러나, 기술진보와 초세계화에 따른 불평등·불안정과 같은 구조적 문제는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에서 전제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 이상 보장하지 않음.
- 약화된 국내 정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에 직접 개입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요구됨.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의해 가능하지만 기업은 일자리 창출로 인한 긍정적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는 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투입물을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함.
- 양질의 일자리 정책은 생산·혁신·고용 유인을 새롭게 하고 시장·국가 규제에 대한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포용성과 성장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특징을 가짐.
 - 성공적인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는 정부와 고용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산업·지역 정책, 노동친화적 기술과 조화를 이루는 혁신정책, 국내 노동·사회 기준을 지키기 위한 정책공간을 허용하는 국제적 차원의 정책협력 등이 민간과 공공 간의 협력적·반복적·실험적 노력과 결합되어야 함.

기조세션. 더 나은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

발표 1.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와 ‘좋은 사회’ (Social Democratic Capitalism and the Good Society)

레인 켄워시 美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교수

-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적 정치체제, 훌륭한 초중등 교육, 큰 복지국가, 고용친화적 공공서비스, 제품과 노동시장에 대한 온건한 규제를 특징으로 함. 이는 인류가 지향해 온 ‘좋은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인간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틀을 제공함.
 -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는 ‘좋은 사회’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자유, 경제성장, 행복, 혁신 등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도 최빈층의 생활 수준 향상, 경제적 안정성과 기회균등성 제고에 상대적으로 효과적임.
 - 또한 인구고령화, 자본이동성 제고, 가족 및 조직 약화, 자동화의 진전 등 향후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유리함.
- 현재까지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를 완벽히 수용한 국가는 북유럽 국가뿐이지만 여러 국가들이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 채택함으로써 그 혜택을 누리고 있음.
 - 북유럽 국가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성공은 특정 국가의 문화나 특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에게 전파 가능
 -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조기교육 및 평생교육,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용친화적 공공서비스 등의 제도를 채택했으며, 미국도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를 위한 장기적인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음.

발표 2. 세대 간 복지계약과 순환적 번영 (The Intergenerational Welfare Contract and Circular Prosperity)

케네스 넬슨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교수

- 여러 국가에서 불평등과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
 - 고령인구 친화적 복지정책은 은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고령인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호를 받게 됨. 연령대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권리가 불균등하게 나뉠 경우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되고 사회 내 위험과 자원의 공유가능성이 낮아짐.
- 세대 간 복지계약 유형은 균형적, 아동친화적, 노동친화적, 고령친화적 4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
 - OECD 국가 중 노르딕 국가들은 균형적 유형, 독일, 일본 등은 노동친화적 유형, 영미권 국가 등은 고령친화적 유형으로 분류되며, 한국은 아동친화적 유형을 보이는 가운데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보호가 특히 약한 특성
- '균형적 세대 간 복지계약'은 각 연령층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사회적 평등을 위한 연령층 간 연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려
 - 균형적 세대 간 복지계약은 특정 연령층에 유리한 사회적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연령층의 위험에 대한 보호장치를 약화시키는 '세대 간 이해상충적 분배'를 방지
 - 연령대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균등하게 제공되는 국가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더 높음.
- 복지 향상과 더불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 간 정의 및 공평한 관계를 수립하여 빈곤 감소, 높은 생활수준 추구, 타인에 대한 신뢰 증진 등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해야 함.
 - 균형적 세대 간 복지계약은 정책수립의 선순환을 형성해 복지국가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임.

정책세션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개혁

발표 1.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모델: 유럽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

- 한국은 초저출산·초고령화로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1~2%대 저성장에 갇혀 있어 현재의 조세수입으로는 필요한 사회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움.
- '복지-고용-경제-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증가와 인력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투자성' 복지비중을 확대해야 함.
 - OECD 24개국 시계열분석 결과,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의 복지지출은 근로연령대인구 대상, 사회서비스 중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s) 중심으로 이뤄짐.
 - 스웨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는 재정안정화, 사회서비스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확대,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제고를 특징으로 하는 복지 개혁을 통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 * (스웨덴) 1991년 금융위기 이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목표의 조세개혁, 확정기여형 연금개혁, 강력한 재정준칙 마련, 사회서비스의 시장화·효율화 개혁 단행
 - * (덴마크) 1980년대 유연한 노동시장-관대한 소득보장-효과적인 교육훈련체제의 '황금삼각형 모델' 구축, '18년 세계 최초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 전환 단행
 - * (독일) 1990년대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 등 재정안정화, 공보육 등 사회서비스 확대개혁으로 유럽의 병자에서 강자로 재부상
 - * (네덜란드) 1982년 바세나협약 이후 단시간 근로 위주의 노동유연화, 시간비례원칙 입각 사회적 보호의 보편화를 통해 '유연-안전성(Flexicurity)' 모델 구축
- 한국은 초고령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노인성 지출의 과도한 증가를 통제하고 근로연령대 인구 대상 복지를 확대해야 함.
 - 이를 위해 공적연금의 재정효율성을 높여 노후 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 도모, 의료공급자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가족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고용률 증대와 인적자원 역량 형성,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통한 사각지대 소득보장 및 취업지원책 마련 필요

발표 2. 불안정한 복지와 사회적 불안정: 일본과 미국의 사례

신광영 중앙대학교 교수

- 일본과 미국은 각기 다른 제도적 환경 하에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겪고 있음.
 - 일본은 기업 중심 경제체제 속에서 대기업의 기업복지 확산으로 국가 차원의 복지제도 발전이 저해되어 왔고, 1990년대 이후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지며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
 - 미국은 국가의 경제 및 복지 개입이 최소한으로 이뤄지며 매우 유연한 노동시장을 특징으로 하지만, 고용유지 기간이 짧고 국가의 실업자 보호 수준이 낮아 소득 불평등도 상승으로 이어짐.
- 양국은 누적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했으나 사회문제 진단과 해법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은 부재
 -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양적완화, 공공사업 확대, 기업친화적 규제 개혁, 출산율 제고, 간병이직제로 지향, 근로방식의 개혁 등을 추진
 - 미국은 클린턴 정부 시절 근로연계복지 도입, 주정부로의 빈민지원 행정 이관, 2년 이상 계속지원 금지 등 근로유인정책을 추진하고, 오바마 정부에서는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무료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
- 일본과 미국 사례를 통해 가족형성, 교육, 노동시장, 조세제도, 복지, 인구변화, 경제성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혁정책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와 실현가능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음.

발표 3. 소득분배 현황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언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

-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가를 견인하는 기술진보와 글로벌화는 다른 한편 전 세계적 소득분배 악화의 요인으로도 작용함.
 - 우리나라도 제조업 기업 주도로 기술혁신 투자 및 교역이 확대되며 생산성 향상을 이뤘으나 부문 간 생산성 격차 및 분배 악화 초래
- 복지국가들이 추구하는 고용창출, 소득분배, 재정규율의 세 가지 목표는 상충되는 측면이 존재해 모든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매우 어려움.
 - 영미형 복지국가는 고용창출 및 재정규율 측면에서 강점을 갖지만 소득분배 측면에서 약점이 있으며, 반대로 독일은 고용창출, 스웨덴은 재정규율 측면에서 약점을 지님.
- 우리나라는 고용창출, 소득분배 측면에서 전통적 복지국가에 비해 뒤처지며, 재정상황은 아직 양호하지만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고용창출, 소득분배, 재정규율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
-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사후적 재분배'보다 '시장소득의 균등한 분포'를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창출해야 할 것
 - 이를 위해 시장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초중등 교육의 성과추적체계 확립과 고등교육 품질 향상을 통한 고숙련 인적자원 양성, 노동시장 안전망 중심의 근로자 보호체계 마련, 국가부채의 추세적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요구됨.

❖ 첨부 3. 연사 프로필

개회식

개회사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現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現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
- 前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 前 국제숨페터학회 회장

축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現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前 국무조정실장
- 前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 前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환영사

홍장표 KD 원장



- 現 KDI 원장
- 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 前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 前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특별세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설계

특별연설: 복지국가를 넘어선 경제정책

대니 로드릭 Dani Rodrik 美 하버드대학교 교수



- 現 美 하버드대학교 케네디공공정책대학원 포드재단 연구교수
- 現 국제경제학회 회장
- 前 美 프린스턴고등연구소 사회과학학교 알버트 오토 허쉬만 재단 연구교수
- 前 美 하버드대학교 케네디공공정책대학원 라피끄 하리리 재단 연구교수
- 前 美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이영 한양대학교 교수



- 現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前 교육부 차관
- 前 KDI 연구위원
- 前 美 메릴랜드대학교 경제학과 부설 IRIS연구소 연구위원

오준병 인하대학교 교수



- 現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現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 위원
- 現 산업조직연구 편집위원장
- 現 아시아태평양 혁신네트워크 이사

기조세션. 더 나은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

성효용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사회)



- 現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現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위원
- 前 세계여성경제학회 재무위원회 위원
- 前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기조연설 1. 사회민주적 자본주의와 '좋은 사회'

레인 켄워시 Lane Kenworthy 美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교수



- 現 美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 사회학 교수
- 前 美 애리조나대학교 사회학 교수
- 前 美 에모리대학교 사회학 교수

기조연설 2. 세대 간 복지계약과 순환적 번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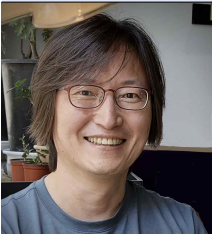
케네스 넬슨 Kenneth Nelson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교수



- 現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스웨덴사회연구소 교수
- 前 스톡홀름대학교 스웨덴사회연구소 부교수
- 前 스톡홀름대학교 스웨덴사회연구소 조교수

지정토론

주병기 서울대학교 교수



- 現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現 국민경제자문회의 대외경제분과 위원
- 現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장
- 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



- 現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
- 現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
- 現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민간위원
- 現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정책세션.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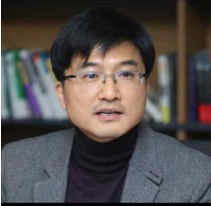
안상훈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사회)



- 現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現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 위원(분과장)
- 前 기획재정부 부총리 자문관
- 前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

발 표 1.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모델: 유럽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



- 現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現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
- 現 한국사회보장학회 부회장
- 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발 표 2. 불안정한 복지와 사회적 불안정: 일본과 미국의 사례

신광영 중앙대학교 교수



- 現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좌교수
- 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 前 한국사회학회 회장
- 前 동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초빙교수

발 표 3. 소득분배 현황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제언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



- 現 KDI 지식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前 고용노동부 차관
- 前 국무조정실 제2차장
- 前 KDI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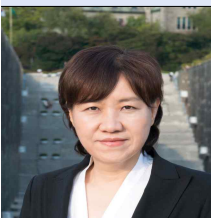
패널토론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



- 現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現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위원
- 現 한국사회과학회장
- 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現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現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 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 前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現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現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 現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 前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

이영옥 KDI 연구위원



- 現 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前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